

## 금융투자업 규정

### <목 차>

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2.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3. 제3자 의뢰평가지 준수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노소영
	담당부서 (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82
	과장	이석란		이메일	lemonkuki@korea. 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2.규제 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6항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제4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3.10~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등급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신평사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신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불건전 행위에 대해 규제 강화 필요		
	7.규제내용	영업조직-평가조직의 비분리, 요청인 등에 자사·계열회사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평가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평평가회사('17.2월 현재 4개사)		
	9.기대효과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신용등급 왜곡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N)	(N)	(N)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영업-평가조직의 분리(Fire-wall),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참여제한 등 외부감사인 등 유사 업권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규제가 강화된 반면, 이해상충 방지로 신평가의 품질이 제고되고 신뢰도가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		
기타	12. 일 몰 설 정 여부	(N)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 규칙 등) ① ~ ⑤ (생략) ⑥ 영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료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 규칙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호----- ----- ----- ----- 1.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료

현 행	개 정 안
<p>3.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p> <p>4.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p> <p>&lt;신 설&gt;</p>	<p><u>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u></p> <p>3.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p>4.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p> <p>가. 신용평가대상이 발행 또는 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나.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p> <p>&lt;생 략*&gt;</p> <p>* 규제사무3(제3자 의뢰평가지 준수사항)에서 기재</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사전적, 적시 정보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부실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발행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평가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는 등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도 신용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유인을 보유하여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Fire wall)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에게 자사·계열사 용역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 평가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선
적용대상		신평사 임직원	임직원 + 배우자
적용 범위	소유제한	평가대상 기업 주식(지분)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
	고용관계자 제한	-	평가대상 기업 근무 또는 이직 후 1년 미만

⇒ 회계법인 등 타 업권의 규제수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16.9.22 발표)	특이사항 없음

### 3. 기대 효과

- ☐ 신평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차단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현행 제재수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N	N	N	N	-	N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해당사항 없음

#### ○ 타법사례

- ☐ 외부감사인인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 \* ① 자기 또는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에 근무하거나 과거 1년 내에 근무한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③ 자기 또는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와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 또한, 금융투자업자 등 타업권에서도 이해상충 가능성 차단을 위해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의 제재 부과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제420조제3항)

### III.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회계법인 등 타업권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며 피규제자인 신평사로부터 의견수렴 결과 준수 가능성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 신평사 위규행위에 대해 금지·제재하는 내용으로서, 규제 차등화 사항과 관련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임

\* '16.3~9월 중 TF 회의 9회 개최

#### 2. 향후 평가계획

- ☐ 시행 이후 매년 금감원의 신평사 위규행위 상시점검 실시

### 3. 종합결론

-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에서 기업-투자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중요 인프라인 만큼,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현행 규제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2.규제 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1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제3항,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9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3.10~4.20	
	6.검증단계	정책검토(의견수렴) 및 확정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평사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은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산정이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그 내용이 일반에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등의 파악이 어려운 바, 개선 필요			
	8.규제내용	신평사의 독립성·투명성 관련 내부정책 및 운영현황을 기술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동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금융위·거래소·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9.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평가회사('17.2월 현재 4개사)			
	10.기대효과	투자자들에게 신평사의 내부통제 현황 등이 공시됨으로써 신평사 자정 기능이 활성화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 상승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N)		(N)		(N)	
기타	13.일 몰 설 정 여부	(N)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N	0	0	0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3. 신용평가회사의 일반현황, 내부통제 관련 정책 및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u>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가목의 서류 :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서류 :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신용사건 발생 이후 '뒷북 등급조정'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신평사의 평가 관련 내부절차가 적절히 구성되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라는 의구심 존재
- 이처럼 평가 관련 내부절차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관련 사항 등은 신용등급 산정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나,
- 그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 등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개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투명성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부과
	내용	신평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내부통제 정책·운영 현황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
규제대안2	대안명	금융감독원의 신평사 내부통제 검사·제재 강화
	내용	금융감독원이 매년 신평사의 내부통제 정책·운영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사하고, 미흡시 개선권고·제재 등 조치 부과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신평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수 없고, 시장 불신만 확대할 우려
규제대안1	투자자 등 시장 평판(reputation)에 의한 신평사의 등급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유도 가능	신평사의 공시부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감독당국의 강력한 검사·제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지나친 공적 규제 논란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16.9.22 발표)	특이사항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내부통제는 영업 효율성, 법규 준수 등을 위해 실행사가 자체적으로 충실히 수행해야 할 부분으로, 대안 2와 같이 금감원 등 공적기관이 제재를 통해 규제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
- 대안 1의 내부통제 구축·운영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

## 3. 기대 효과

- ☐ 투자자 등 시장에 실행사의 내부통제구조 및 운영 현황이 공개됨에 따라, 시장 평판을 통한 실행사 자정기능 활성화를 도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신용등급 산정 관련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시장 자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실행사 자체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N	N	N	N	Y	N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EU) '09.4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촉발한 신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평사는 매 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의 내부 점검결과, 경영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

☐ (미국) 美 SEC는 매년 모든 NRSRO(등록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결정과 관련된 정책, 절차, 방법론, 기준 및 평가모형 준수여부를 직접 점검 (Rating Action Review)

##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평사 의견수렴('16.11월) 결과, 내부통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이해관계자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투명성보고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기존 업무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작성 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는 의견

\* 회사 개황, 신용평가 실적(결과) 등 제출

#### ○ 규제 차등화 방안

☐ 모든 신평사('17.2월 현재 4개사)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공시의무로 규제 차등화 해당 없음

## 2. 규제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현재의 신평사 공시의무에서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금융위·금감원의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 가능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현재의 신평사 공시의무에서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금융위·금감원의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 가능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임

\* '16.3~9월 중 TF 회의 9회 개최

### 2. 향후 평가계획

- ☐ '18년부터 연 1회 각 신평사가 직전 사업연도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금융위·금감원·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

### 3. 종합결론

- ☐ 신평사의 내부통제 정책 및 준수여부가 공개되고 시장규율에 의해 신평사 자정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투명성 보고서 공시를 도입 (규제대안 1)하는 것이 타당함

-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의 신뢰도 제고 목적에 비하여 신평사의 공시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투명성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부과>

- 공시 내용은 EU에서 도입한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업무보고서 제출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신평사의 공시업무 부담을 최소화

\* '09.4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촉발한 신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며, 신평사는 매 연도말 이후 3개월 내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의 내부 리뷰 결과, 경영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5년간 공시

- 이에 따라, 기존의 업무보고서 내용 외에 신평사가 새롭게 작성해야 할 내용은 3p 수준에 불과하고, 별도 인쇄·배포 없이 전산으로 제출하므로 실제 소요비용은 0에 수렴

<규제대안 2 : 내부통제 관련 검사·제재 강화>

- 금감원 등 공적기관이 신평사의 내부통제를 매년 검사하고, 미흡시 개선권고·제재 등을 통해 규제할 경우 신평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

⇒ 규제대안 1이 규제 합목적성 및 최소침해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3자 의뢰평가시 준수사항		
	2.규제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6항제5호, 제8-19조의13제3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3.10~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가 요청인일 경우의 신용평가("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였으나,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의 정보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3자 의뢰평가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		
	7.규제내용	신용평가대상과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정보제공 관련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제3자 의뢰평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을 표기하고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평가회사		
	9.기대효과	제3자 의뢰평가가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N)	(N)	(N)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신용평가시, 신용등급에 별도 표시를 하고 신용평가서에 신용평가 대상의 정보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정보라는 사실을 간략히 기재만 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미미한 반면, 투자자의 혼란은 현저히 줄어드는 편익이 있음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N)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 규칙 등) ① ~ ⑤ (생략)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 규칙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제6호----- ----- ----- -----.
1. ~ 4. (생략)	1. ~ 4. (생략*)  * 규제사무 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에서 기재
<신설>	5. 제8-1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대상 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 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제8-19조의13(제3자 의뢰평가) ① 신 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 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 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 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 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 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현 행	개 정 안
	<p>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p> <p>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u>약정 없는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  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  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  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u></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기존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인 발행기업의 요청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신용평가(“제3자 의뢰평가”)가 가능하도록 허용
  - 다만, 신용평가대상 기업의 정보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유통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왜곡을 가져오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신용평가대상의 자료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제3자 의뢰평가를 하는 경우, ❶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을 표기하고 ❷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16.3~9월 중 TF 회의 9회 개최	특이사항 없음
발행기업 (상장회사 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설명 및 설문조사 실시	특이사항 없음
기관투자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 3. 기대 효과

- ☐ 투자자가 발행기업의 정보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동 평가정보를 투자판단에 참고(reference)할 수 있도록 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제3자 의뢰평가라는 신평사의 업무영역을 새롭게 허용하면서,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N	N	N	N	-	N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미국, EU 등에서는 법령 등에서 신용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장 내의 의견교환 차원에서 신용평가 산업이 발전

- 이에 따라, 시장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며,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의 신용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향

#### ○ 타법사례

- ☐ 해당사항 없음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표기\*하고, 평가대상기업의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간략히 기재만 하면 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부담은 미미

\* 예: (발행기업 요청시 등급) AA / (제3자 요청시 등급) AA(3rd)

○ 피규제자인 신용평가회사 의견수렴 결과, 준수에 문제 없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제3자 의뢰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신용평가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제 차등화 필요성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

2. 향후 평가계획

☐ '17.하반기 제3자 의뢰평가 허용 후, 매년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

3. 종합결론

☐ 규제대안의 경우, 피규제자인 신용평가회사의 부담은 극히 미미한 한편, 투자자가 평가정보가 발행기업의 정보제공 없이 공시정보

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편익은 큼